

## 파산선고

[울산지방법원 2017. 1. 23. 2014하합501]



### 【전문】

【신 청 인】 신청인 1 외 19인 (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1인)

【채 무 자】 진장.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(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)

### 【주문】

】

1.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2.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.

【신청취지】 채무자 진장.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(이하 '채무자 조합'이라 한다)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

### 【이유】

#### 】1. 인정사실

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,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.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- 1) 채무자 조합은 울산 북구 진장동, 명촌동 일대 토지 1,441,300㎡(이하 '이 사건 사업구역'이라 한다)의 토지구획정리 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 한다)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1,61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1998. 8. 14. 울산광역시로부터 조합설립 및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.
- 2) 신청인들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다.

나.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

- 1) 채무자 조합은 1999. 1. 28. 평창토건 주식회사(이하 '평창토건'이라 한다)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, 1999. 2.경 평창토건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체비지 316,530㎡에 관하여 그 체비지 대장상 명의를 변경 해주었다.
- 2) 평창토건은 기성고 70% 남짓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, 2006. 12. 26.경 지급불능에 이르렀다. 그 후 채무자 조합 등 평창토건의 채권자들은 2007. 11. 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08. 4. 25. 평창토건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.
- 3) 채무자 조합은 위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605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, 파산자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은 이를 시인하였다.
- 4) 이 사건 사업은 평창토건의 파산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3. 12. 기준 공정률은 87.17%이고, 그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.

다.

신청인들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채권

- 1) 울산 북구청장은 1999. 7. 16. 농지법 제40조, 동법 시행령 제52조,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채무자 조합에게 농지조성비 8,597,974,320원, 농지보전부담금 11,853,814,090원, 합계 20,451,788,410원(이하 '이 사

건 부담금'이라 한다)을 부과하였다.

그런데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.

2) 이에 울산 북구청장은 2001. 9. 15.경 농지법 제4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의 중단을 명할 경우, 만성적 민원 발생, 사업시행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도산우려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, 압류한 체비지가 추후 매각될 경우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부담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되, 향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개별 건축 인·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, 이 사건 부담금 중 그 인·허가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채무자 조합에게 부과하여 그 부담금이 납부될 경우에 한하여 건축 인·허가를 내 주기로 방침을 정하였다.

3) 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자신들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부담금 중 자신 소유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납하였다.

4) 신청인들은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대납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259호,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3278호로 제기하여 승소하였다.

신청인들이 위 각 소송에서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인정된 원금 합계는 388,409,630원이다.

#### 라. 채무자 조합의 자력

1) 채무자 조합의 부채는 농지부담금, 공사비 등 합계 7,980,058,963원에 이른다.

2) 채무자 조합의 자산은 전세보증금 36,000,000원, 사무실 집기류 6,605,327원 및 파산자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채권 60,500,000,000원, 파산자 평창토건에 대한 재단채권 3,909,763,335원, 합계 64,452,368,662원이다.

그런데 파산자 평창토건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시인된 전체 채권이 580,022,336,535원에 이르고, 그중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된 채권이 약 60억 원이며, 현재까지 재단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7건이 계속되고 있어, 파산자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채권은 실제로 변제받기 어렵고,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도 그 액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.

3) 신청인들은 2010. 7. 23.과 2011. 7. 8.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대납한 부담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,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.

## 2. 판단

### 가. 파산원인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채무자 조합은 현재 파산자 평창토건에 대한 채권 외에는 특별히 신청인들의 채권을 비롯한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없는데, 파산자 평창토건의 파산절차에 비추어 보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,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있다.

### 나. 파산절차 남용

1) 채무자 조합은, 채무자 조합이 파산할 경우 1,616명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고,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, 신청

인들이 자신 소유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무자 조합을 위하여 대납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회수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한 것이므로, 이 사건 신청은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- 2) '채무자 조합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'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'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.

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, 파산신청이 '파산절차의 남용'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.

특히 위 법 규정의 입법 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,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 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채무자 조합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,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,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,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, 채무자 조합이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(대법원 2011. 1. 25.자 2010마1154, 1555 결정).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한 것으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.

- ① 신청인들은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259 부당이득금반환,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3278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각 승소한 후, 평창토건이 채무자 조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체비지 토지대금 상당의 약정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약정금 채권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7703, 377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. 9. 21. 인용결정을 받고,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987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. 9. 21. 인용결정을 받았다.

신청인 20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은 파산자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429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. 5. 29. 채무자 조합의 평창토건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, 2014. 6. 24.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.

신청인 20은 파산자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7250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. 8. 29. 다른 신청인들과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, 2014. 10. 1.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.

이와 같이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여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자 2014. 12. 12.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.

- ② 채무자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조합으로, 현재 체비지의 소유권도 평창토건으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파산을 하더라도 환가하여 분배할 자산이 없고, 이러한 사정은 조합원인 신청인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이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여러 소송을 진행한 신청인들이 파산자 평창토건을 상대로 한 소송이 패소 확정된 직후 제기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그 목적이 진정한 파산절차의 진행보다는 자신들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조합을 압박할 수단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.

- ③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의 총수는 1,616명이고, 그중 76명의 조합원이 채무자 조합의 파산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.

채무자 조합은 2016. 9. 6.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파산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,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변경하는 사업변경안을 의결하였다.

④ 채무자 조합이 파산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은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1,616명의 조합원 사이에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.

또한 이 사건 사업의 공정보고서에 의하면 주변 도로 등도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집중 호우가 생길 경우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채무자 조합이 파산될 경우 개인적·사회적으로 유·무형적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.

⑤ 신청인들은 조합장 등 임원들의 부정행위로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조합이 파산되어 부정부패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러한 사정은 형사고발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, 파산절차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⑥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파산자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고,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계획변경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진행할 예정이다.

### 3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판사 손봉기(재판장) 김동욱 김경록